
국외출장 결과보고

- 라오스 KSP 성과추적 -

2026. 9. 28(화) ~ 10. 2(금)

한국개발연구원

I. 개 요

□ 배경 및 목적

- (성과추적) KSP 성과 발현 및 기여 경로 분석을 위해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추적 실시
 - 정부의 AI·디지털 ODA 확대 기조*에 따라 AI·디지털 분야 KSP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성과 발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라오스를 대상국으로 선정
- * 무상 AI ODA 추진전략 2026-30(의결 예정) 및 EDCF 2026-28년 중기운용 계획 중점 분야 내 AI·디지털 포함 등
- 단순 성과 확인을 넘어 기여분석을 적용해 복합적인 정책 환경에서 KSP의 실질적 기여도와 성과 창출 경로를 분석
- * 기여분석(Contribution Analysis): 정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을 고려하면서 사업의 실제 기여도와 영향경로를 규명하는 평가 기법

□ 출장 개요

- (출 장 지) 라오스 비엔티안
- (출장일정) '26. 9. 29.(화) ~ 10. 2.(금), 출·입국일 포함
- (출 장 자) 우혜영, 전영진, 한상아 3인
- (추진방식) 출장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면담을 통해 KSP 성과·기여 경로를 조사

□ 성과추적 대상 사업

- (대상사업) 기술통신부, 지식재산청, 국가인터넷 대상 3개 사업

연도	사업명	협력부처
2023/24	디지털 인증 체계 개선 방안	국가인터넷센터
2022/23	지적재산권 기반 농업발전 역량 구축	산업통상부
2021/22	전자정부 활성화 이행계획 수립 지원	기술통신부

II. 세부 출장 일정

날짜	시간	일정	비고
9/29(화)	08:00-17:20	[출국] 인천-하노이-비엔티안	
	18:30-19:30	공항-호텔 이동	
9/30(수)	10:00-12:00	라오스 기술통신부	21/22 협력부처
	14:00-16:00	성과추적 콘텐츠 제작 인터뷰	
10/1(목)	10:00-12:00	라오스 산업통상부	22/23 협력부처
	14:00-16:00	라오스 국가인터넷센터	23/24 협력부처
	17:00-18:00	현지수집 자료정리 및 디브리프	
	21:00-22:00	비엔티안-공항 이동	
10/2(금)	00:50-08:10	[귀국] 비엔티안-인천	제주항공

- 출장 결과 요약 -

○ KSP 후속성과 확인

- 전자정부·지식재산권·디지털 인증 분야 KSP 정책제언이 후속 정책·제도 검토 및 관련 사업으로 연계되고, NIA·KOICA·KISA 등과의 후속협력으로 확대된 사례 확인
- 특히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 제정 및 디지털정부 로드맵 수립 등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가 확인됨.

○ KSP 성과 및 제약요인 파악

- KSP 성과는 정책제언의 직접적인 법·제도 반영뿐 아니라 정책 방향 설정, 정책담당자의 인식·역량 제고 및 후속협력의 기반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재원·전문인력 부족, 시스템 분절 및 사업 종료 후 교류 부족 등이 주요 제약요인으로 확인됨.

○ 향후 KSP 협력방향 도출

- KSP 단계에서부터 후속사업의 재원 및 협력기관을 발굴·연계하고, 정책자문 → 후속사업 → 역량강화·시스템 구축 → 정책·서비스 확산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확인함.
- 또한 사업 종료 이후 현지 세미나·성과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후속협력 발굴이 필요함.

○ 협력국 관점의 성과확산 추진

- 기존 공여기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나아가 협력국 관계자의 'Voice'를 반영한 양방향 성과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확인
- 라오스 기술통신부 및 국가인터넷센터 관계자가 직접 KSP 이후의 정책·제도 변화와 후속협력 경험을 작성하는 시범 콘텐츠 제작에 협의함.

III. 면담 세부 결과

1. 라오스 기술통신부

- 일시 · 장소: 2026년 9월 30일(수) 10:00~12:00, 기술통신부
- 참석자: 우혜영, 전영진 한상아(이상 KDI), Amphonesak Thepphoumy 부국장, Vannapha Phommatansy 과장, Kittisack Pasomsouk 과장(이상 기술통신부 디지털정부센터)

□ 주요 논의 내용

- “2021/22 라오스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지원” KSP 사업 경과 및 성과 내역 조사
- 사업 배경
 - 라오스는 전자정부·ICT를 국가 디지털 전환 및 행정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관련 법·제도와 부처 간 시스템 연계,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 경험을 전수 받고자 본 사업 추진
- 사업 내용
 - 사업에서는 라오스의 전자정부 현황을 진단하고,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적역량 강화 방안과 단계적 이행계획을 제시함.

□ 성과추적 결과

- KSP 정책제언의 후속 이행 및 제도적 성과 확인
 - 면담 결과, KSP에서 제시한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정비, 기술 로드맵 수립 및 인적역량 강화 등이 후속 협력사업과 연계되어 실제 정책·사업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확인
 - 법·제도 측면에서는 KSP의 정책자문을 바탕으로 2022년

정부문서 관리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AI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포괄하기 위한 개정·보완 법령을 마련하여 총리 승인을 추진 중임.

- 기술적 측면에서는 KSP 종료 이후 한국 NIA와의 디지털정부 협력사업을 통해 단계적 정부 디지털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로드맵은 2026년 라오스 정부의 승인을 완료함.

* 라오스 측은 KSP와 NIA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면서도, KSP에서 제시된 방향을 후속 사업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함.

- 인적역량 측면에서는 KSP에서 제안한 공무원 및 ICT 전문인력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KOICA와 디지털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협의 중임.

○ KSP 계기 한국과의 후속협력 확대

- 라오스 측은 KSP가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최초의 정책자문 경험이자 이후 UNDP, NIA, KOICA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함.
- 특히 KSP 과정에서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및 한국 초청연수를 통해 라오스의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디지털정부 발전 경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24년에도 KSP 후속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데이터 거버넌스, AI 활용,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다만 현재 한국과의 정부 간 협력은 주로 KOIC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등 한국 정부부처와 라오스 기술통신부 간 정례적인 직접 협력채널은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범정부 디지털 전환의 과제

- 라오스는 부처별 상이한 시스템과 외부 공여기관의 지원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이 혼재하면서 데이터의 분산 및 상이한 표준 적용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현재 데이터 분류·관리체계 구축 및 AI 활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Decree)을 마련하여 총리 승인을 추진 중임.
- 또한 국가디지털전환위원회가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통신부가 타 부처의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까지 조정·통제하기에는 재원과 권한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시사점

- 본 사례는 KSP의 정책자문 결과가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NIA·KOICA 등 후속 협력과 연계되면서 법·제도, 기술 로드맵 및 인적역량 강화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라오스 측이 KSP를 이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초기 정책적 기반이자 후속사업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SP 성과의 실질적인 영향은 사업 종료 시점의 정책 반영 여부뿐 아니라 후속 협력의 형성과 구체화 과정까지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아울러 면담자는 KSP와 같은 단기 정책자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 상주인력을 통한 장기적 협력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의 효과를 강조함.
- * NIA 사업의 경우 현지 담당자가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 제도·문화와 정책과정을 이해하고 입법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한 점이 실제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바, 향후 KSP에서도 후속사업과의 연계 및 장기적 정책협력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KSP 사업의 성과가 후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축적하고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성과 아카이빙 및 성과확산의 중요성도 확인됨.

2. 성과추적 콘텐츠 제작 인터뷰

- **일시 · 장소:** 2026년 9월 30일(월) 14:00~16:00, 기술통신부
- **참석자:** 우혜영, 전영진, 한상아(이상 KDI), Kittisack Pasomsouk 과장(라오스 기술통신부 디지털정부센터), Nilapheth Khammoungkhoun 과장(라오스 국가인터넷센터), Vilaythong Southavilay 과장(재무부)

□ 주요 논의 내용

○ 기존 KSP 성과 자료 축적(Archiving)의 한계 및 추진 방향

- 그간 KSP 성과 Archiving은 공여기관인 KDI의 관점에서 사업 성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협력국의 경험과 평가 등 ‘협력국 Voice’를 반영한 양방향적 성과 Archiving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KSP 성과를 한국 측의 일방적인 성공사례로 제시하기보다는, 협력국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와 평가를 중심으로 KSP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보여주는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함.

○ 콘텐츠 구성 방향

- 단순한 사업 성과 및 산출물 소개를 넘어, KSP 이후 협력국의 정책·제도 변화, KSP의 활용 및 기여, 후속협력, 향후 시사점 및 영향(impact) 등을 협력국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추진함.
- 이를 통해 KSP 성과를 한국 측의 일방적인 성과 홍보가 아닌, 협력국이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기록·확산하고자 함.

○ 라오스 성과추적 계기 시범 콘텐츠 제작

- 사전 검토 결과, 2021/22 전자정부 KSP 및 2023/24 디지털 인증체계(를 우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지 관계자의 Voice를 담은 기고문 형태의 성과추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함.
- 관련하여 양 기관 KSP 참여 핵심인력을 면담하여, 성과추적 콘텐츠의 개요 등을 상세 설명하고, 라오스 정부 입장에서 KSP 성과를 기고문 형식으로 제작하여 KDI에 제작하는 방향을 협의 완료함.
- 특히 KSP 종료 직후 확인되는 산출물이나 단기적인 정책 반영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 협력국에서 어떠한 정책·제도적 변화가 나타났는지, KSP의 지식과 권고가 어떻게 활용·확산되었는지, 후속 협력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협력국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방향으로 성과 콘텐츠를 구성하기로 협의함.

○ 제작 및 활용 방식

- 라오스 측이 기고문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KDI에서 외부 홍보 목적에 맞게 편집 후, 기고자 및 관계기관의 최종 검수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완성된 콘텐츠는 KDI의 성과 Archiving뿐 아니라 협력국의 대내외적인 KSP 성과 확산 및 후속협력 기반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기대 효과

- KSP 성과 콘텐츠를 협력국의 정부 관계자 및 유관기관이 직접 활용·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국 내에서 KSP 성과를 확산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및 후속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 측에서도 협력국의 관점에서 KSP 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라오스 산업통상부

- **일시 · 장소:** 2026년 10월 1일(목) 10:00~12:00, 산업통상부
- **참석자:** 우혜영, 전영진, 한상아(이상 KDI), Santisouk Phounesavath 지식재산권국장, Somvath Phothisat 지신재산권국 부국장, Souligna Sisomnuck 산업국 부국장, Kertmamy Keobounphanh 국제협력국 팀장(이상 산업통상부), Sinlaphab Thilavong 현지전문가

□ 주요 논의 내용

- “2022/23 라오스 지식재산권 기반의 농업 발전을 위한 역량 구축” KSP 사업 경과 및 성과 내역 조사
- 사업 배경
 - 농업이 라오스 경제의 핵심 산업임에도 농산물이 주로 원물 형태로 유통되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농산품의 브랜딩 및 상품가치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 내용
 - 상표·지리적표시(GI) 등을 활용하여 농산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제도 및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성과추적 결과

- KSP 제언의 정책적 활용 및 농업 분야 지식재산권 인식 확산
 - 면담 결과, KSP 보고서의 정책제언이 법령이나 제도로 직접 채택되기보다는 농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GI를 활용한 농산품의 브랜딩 및 판매 활성화, 품질관리 등의 내용이 관련 부처 및 지역에 공유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전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라오스 측은 KSP를 통해 기존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농업 분야로 확장하여 검토할 수 있었으며, 농업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농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실제로 쌀·차·실크 등의 생산지 및 생산자 등에 대한 관리가 개선되고, GI 관련 상품과 제도가 확대되는 등 농산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됨.

○ 한국 사례의 현지 정책 참고 및 적용

- 한국 초청연수를 통해 농산품의 생산·관리·판매가 연계되는 구조와 농협 등 생산자 조직 운영 사례를 직접 경험한 것이 라오스의 관련 정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특히 농민이 생산한 농산품을 조직화하여 관리하고 판매로 연결하는 한국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라오스에서도 생산자 조직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한국 사례가 그대로 법령이나 제도로 도입된 것은 아니며, 라오스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활용한 것으로 확인됨.

○ GI 및 농산품 품질관리의 제도화 추진

- 현재 라오스에서는 쌀·차 등 주요 농산품을 중심으로 GI 제도를 활용한 상품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과거 원물 또는 단순 포장 형태로 유통되던 농산품을 브랜딩·패키징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GI 제품의 생산지·생산자 및 품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과 GI의 가치에 대한 교육도 지속하고 있음.

- 다만 종합 상표심사 가이드라인 등 KSP에서 제안한 일부 제도는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GI 관련 제도 역시 현재 체계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단계로 확인

○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표준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

- KSP에서 제시한 EU 상표출원 전략과 관련하여, 현재 라오스의 차 등 일부 농산품이 독일 등 EU 시장에 원물 형태로 판매된 사례는 있으나, EU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패키징된 완제품으로 수출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
- 이는 EU 시장 진출에 필요한 상품의 품질·인증·판매량 및 국제표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생산자 역량과 품질관리 측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라오스 측은 국제표준 인증 취득을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만큼, 우선 내수시장에 적용 가능한 품질관리 및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생산자 조직을 강화하는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특허청과도 GI 관련 협력을 진행하며 녹색 패키징, 품질관리, 인증 및 관련 자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향후 협력 수요 및 KSP 사업방식 평가

- 라오스 측은 향후 농산품의 생산·상품등록·특허 분야에서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관리와 창의경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함.
- 또한 중국과 체결한 협회·기업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라오스 농산품의 한국 시장 진출 및 한국 기업과의 상호 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을 넘어 실제 상품의 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임.
- KSP 사업에 대해서는 라오스에 부족한 정책 및 제도에

- 대해 한국의 실제 사례를 학습하고, 문서로만 접하던 정책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사업기간이 짧고 종료 이후 후속 교류가 부족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제시하면서, 사업 종료 후 현지 세미나·성과확산 행사 등을 통해 정책 담당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성과를 확산하고 후속 협력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시사점

- 본 사례는 KSP의 정책제언이 직접적인 법령·제도 도입보다는 정책 담당자의 인식 제고와 정책 검토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관련 부처 간 지식 공유 및 후속 정책 추진으로 확산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농업과 같이 라오스의 핵심 산업 분야에 지식재산권을 접목하여 원물 중심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서 브랜딩, GI, 품질관리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정책적 관심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주로 내수시장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KSP에서 제안한 EU 시장 진출 및 국제표준 확보 등 고도화된 성과로는 아직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향후 정책자문을 통해 제시된 전략이 실제 생산자 조직화 → 품질관리 → 인증 → 상품화 →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후속협력을 설계한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현지 정착 가능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면담에서 제기된 사업 종료 후 성과확산 및 후속교류의 필요성은 KSP 성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으로, 사업 종료 이후 현지 세미나·성과공유 및 후속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정책 담당자와의 교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4. 라오스 국가인터넷센터

- **일시 · 장소:** 2026년 10월 1일(목) 14:00~16:00, 국가인터넷센터
- **참석자:** 우혜영, 전영진, 한상아(이상 KDI), Minaxay Philavong 센터장, Phommathat Phoumanivong 부센터장, Nilapheth Khammoungkhounne 과장, Somchai MOUA 서기관(이상 라오스 국가인터넷센터)

□ 주요 논의 내용

- “2023/24 라오스 디지털 인증체계 개선 방안” KSP 사업 경과 및 성과 내역 조사
- 사업 배경
 - 라오스는 2015년부터 전자서명 및 디지털 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시스템의 노후화, 부처 간 상호운용성 부족, 자원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디지털 인증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음.
- 사업 내용
 - 라오스의 디지털 인증체계를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인증체계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한 제도·기술·역량 강화 방안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함.

□ 성과추적 결과

- KSP 정책제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인증체계 개선 추진
 - 라오스 측은 KSP를 통해 전자서명 및 디지털 인증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한국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특히 KSP 결과보고서가 향후 디지털 인증체계 개선 및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고 설명함.

- 기존 2015년 전자서명 관련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사업 가운데 2021~2025년 계획된 주요 과제는 상당 부분이 이행되었으며, 현재 2026~2030년 디지털 인증·전자정부 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후속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전자서명은 현재 정부 업무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 관련 업무에서 기존에 22회가량 필요했던 서명을 4회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음. 현재 15개 부처 및 8개 주에서 관련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현재 전자서명의 약 90%가 정부 내부에서 활용되고 있어 국민·민간 부문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향후 민간·국민 대상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

○ 후속 한국 협력사업으로의 연계 시도

- KSP 종료 이후 라오스 측은 KSP 결과를 기반으로 KOICA 사업을 통한 디지털 인증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증체계 구축 자체보다는 디지털정부 훈련센터 구축이 우선순위로 검토되면서 당초 사업은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 당시 라오스 기술통신부에서는 디지털정부 훈련센터와 인증체계 구축 등 다수의 사업을 KOICA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됨. 이 중 훈련센터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되어(900만불 규모) 현재 건축업체 선정 단계에 있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이 추진될 예정임.
- 또한 KSP 종료 이후 KISA와의 협력도 이어져 관련 교육 및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라오스 담당자가 2025년 한국을 방문하여 디지털 인증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라오스 측은 향후에도 디지털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KSP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이 후속 ODA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KDI 측의 지원을 요청함.

○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및 제도 개선

- 라오스는 2026~2030년 계획을 통해 경찰행정 분야의 디지털 시스템 및 국민이 여러 공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One Door Service Center(ODSC) 등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현재 2015년에 제정된 전자서명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29~2030년을 목표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전자서명과 디지털 인증의 국민 대상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인증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 창출과 수익모델 마련이 필요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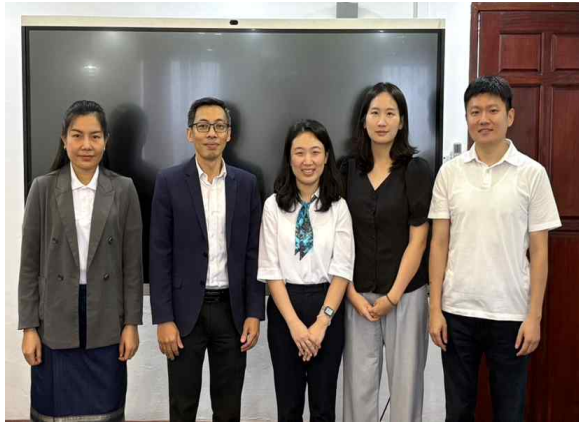
○ 시스템 및 자원 측면의 구조적 한계

- 현재 라오스의 디지털 인증 및 전자정부 시스템은 한국·일본·유럽·베트남 등 여러 국가 및 기관의 지원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이 혼재하고 있어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과 통합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
- 특히 서버 및 메모리 등 시스템 구축비용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었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라오스 측은 자금 확보를 현재 디지털 인증체계 발전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평가하였으며, 기술인력 확보 역시 지속적인 애로사항으로 언급함.
- 또한 디지털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령, 서비스, 기술 및 자원조달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나, 라오스 정부가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량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시사점

- 본 사례는 KSP가 기존에 추진되던 디지털 인증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한국의 제도·기술 경험을 라오스 정책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지식 기반으로 기능한 사례로 평가
- 특히 KSP 종료 이후 라오스 정부 차원에서 KISA, KOICA 등 한국 기관과의 후속협력을 타진하였으며, 디지털정부 훈련센터 구축 등 직접적인 인증체계 구축사업이 아닌 관련 역량 및 인프라 사업으로도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현재까지 확인되는 KSP의 성과는 KSP 정책제언이 특정 법령이나 시스템에 직접 반영되었다기보다는 후속 정책 및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 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라오스의 경우 자원 부족과 시스템의 분절성이 정책 이행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디지털 분야 KSP는 정책자문에 그치기보다 정책자문 → 후속 ODA·재원 연계 → 시스템 구축 → 역량 강화 → 실제 서비스 확산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협력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KSP 종료 직후 라오스 측이 KOICA 후속사업을 시도했으나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례는, KSP 단계에서부터 후속사업의 자원 및 협력기관을 함께 발굴하고 연계하는 체계가 중요함을 보여줌.

라오스 기술통신부 면담



라오스 산업통상부 면담



KSP 기반 성과(GI 기반 패키징) 사례



라오스 국가인터넷센터 면담



□ 전자정부 정책 현황

○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

- 라오스의 '24년 전자정부 발전 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는 0.4404로, 193개 중 152위(대한민국 0.9679, 4위)
- 이는 '20년 167위(0.3288)에서 소폭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0.6382)에 크게 못 미침.

○ 국가 디지털경제 개발 전략(2021-2030)

- (목표) 생산, 마케팅 및 디지털경제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핵심 도구로 활용
- (전략 목표 - 플랫폼 개발) 디지털 정부, 전자 토지 관리 시스템, 전자상거래, 전자 결제, 디지털 बैं킹, 전자 시장, 데이터 교환 등을 위한 플랫폼 개발
- 이는 23/24 라오스 디지털 인증 체계 KSP 내용 중 디지털 정부 인증 체계(전자서명·PKI)와 연관
 - * Public Key Infrastructure: 온라인 디지털 인증의 생성·관리·배포·사용·저장·파기와 공개키 암호화 관리를 위한 역할·정책·기술·절차의 총칭

○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

- 라오스 기술통신부(MTC)는 국민이 휴대폰을 통해 정부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3.8 '고브엑스(Gov-X)' 앱을 출시
- G-Form을 통한 다양한 정부 양식 다운로드, ▲사회복지 지원 현황 조회, ▲사업자 등록증 조회, ▲G-Office를 통한 정부 문서 상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 21/22 라오스 전자정부 KSP 정책제언 중 범정부 시스템(정부전용 네트워크망 G-net, 정부 내부 채팅앱 G-chat, 정부 클라우드 G-drive 등) 확산과 유관

□ 한-라오스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23.5~'25.12) 공동협력과제

- (2023) 국제기구 평가 지표 기준 디지털 정부 수준 진단 및 온라인 공공서비스 정책 로드맵 수립
- (2024)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개발,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한 역량개발

□ DO 1. 아세안 전역에 걸친 원활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인프라 (Seamless and Inclusive Digital Infrastructure Across ASEAN)

- (EA 1.2) 아세안 회원국의 신뢰할 수 있는 전자거래를 위해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권리 기반 국가 디지털 신원(ID) 시스템 구축을 지원
 - 전자인증 체계, PKI(공개키기반구조), 전자서명 프레임워크 등이 언급되어 '23/24 라오스 KSP의 PKI 기반 국가 인증체계 및 NRCA(국가루트 인증기관) 논의와 연계

□ DO 2. 지속가능하고 지능적인 디지털 정부(Sustainable and Intelligent Digital Government)

- (EA 2.1) 이용자 중심의 상호운용·안전한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제고
 - 21/22 라오스 KSP 제언 내용 중 범정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LGEA) 구축과 일치
- (EA 2.5)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공부문 리더의 디지털 역량, 리더십 역량, 변화관리 역량을 강화
 - 21/22 라오스 KSP 제언 중 HRD(인적자원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직결
- (EA 2.6) 아세안 회원국의 디지털 전략 및 마스터플랜에 ADM 2030의 지속가능, 포용적, 상호운용적, 범정부적 디지털 전환 원칙을 반영하도록 지원
 - 21/22 라오스 KSP 제언 내용 중 라오스 마스터플랜 - 아세안 디지털 계획의 정합성 확보와 일치

□ DO 4. 탄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Resilient, secured and trusted Digital ecosystem)

- (EA 4.2) 아세안 역내 신뢰 가능한 거래와 안전한 신원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함.
 - 23/24 라오스 KSP 제언 내용 중 국가 인증 체계가 향후 아세안 역내 상호인정 체계로 확장될 잠재적 방향성을 시사함.

□ 주요사항

- 2021년 UN 개발정책위원회는 라오스를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졸업요건을 충족해 5년간(2021-2026) 준비기간을 부여
 - * 졸업기준: (1인당 GNI) \$ 1,222 이상, (인간자원지수) 66 이상, (경제취약성 지수) 32 이하
- 라오스 정부는 2030년까지 1인당 GNI 4,000달러 수준의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Income Country) 진입을 목표로 설정
- '24.10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라 양국은 EDCF 기본약정, 기후변화 협력 기본약정, 온실가스 감축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의 협력 약속